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tel:(8610)8531-0700 ext 0860
fax:(8610)8531-0868
www.koreanembassy.cn

中國環境市場動向
www.konetic.or.kr

편집관리: 박미자, 전연화
번역협찬: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
Email : dusk1120@naver.com

국가환경정보센터에서는 중국주재 정보원(IP)로부터 수집된 환경시장 정보를 국내 1만7천여 명의 기업인 및 전문가에게 주간단위로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동 자료의 수신을 추천코자 할 경우 huanjing00@hanmail.net 메일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호 동향부터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揭 示 板

1편 : 주간 환경 이슈

- 1.1 환경보호부 10월 짚 소각금지 상황 발표

2편 : 정책자료 · 기타

- 2.1 상해스모그 황색경보

3편 : 중국 풍경

- 3.1 북경-우루무치 16시간만에 잇는 고속철, 2017년 개통

環 境 動 向

1. 정책 · 법률 · 기타

- 1.1 수십조(水十條)실행 초읽기에 들어가, 투자규모가 대기방지보다 커 (중국환경망 2014.11.18)
1.2 철도수리공사 등 중대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재촉(중국환경보 2014.11.18)
1.3 환경보호정책은 심의에 의거(환경정보망 2014.11.19)
1.4 비화석 에너지 기계설치 비중 연말까지 1/3, 구조 우수화 추진(기후변화정보망 2014.11.19)
1.5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 3대 관점(기후변화정보망 2014.11.20)

2. 사업계획 · 발주동향

- 2.1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친환경저탄소에너지 공략 방향(기후변화정보망 2014.11.20)

3. 환경오염현황 및 관리

- 3.1 APEC기간 대기상태 전력을 다해 확보 (중국환경망 2014.11.17)

經 濟 動 向

1. 주요기사

- 1.1 '14.10월 재정소득 중 서비스 업종 기여도 증가 (신화망, '14.11.15)
1.2 공업·신식화부, '14.12월 스텝문자 처리규정 발표 예정(신화망, '14.11.17)
1.3 국무원, 상업건강보험 발전 촉진 의견 발표(매일경제신문, '14.11.18)
1.4 중앙기율위원회, 제3차 순시 계획 발표(신경보 '14.11.19)
1.5 시진핑 주석, 세계 인터넷 대회 개막식 축하 전달(신경보 '14.11.19)
1.6 국무원, 기업 자금조달난의 해소를 위한 10대 조치 추진(경제참고보 '14.11.20)
1.7 '15년 지방채 규모 확대될 것으로 예상(중국증권보 '14.11.19)

2. 국내산업

- 2.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탄 수출관세 인하 추진 (증권일보, '14.11.17)
2.2 발개위, 5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가 허가(신식시보, '14.11.18)
2.3 발개위, '14년 정부승인 투자프로젝트 목록 발표(인민일보 '14.11.19)

3. 금융재정

- 3.1 국무원, 중소기업 세제 우대 혜택 추가 발표(신화망, '14.11.15)
3.2 중앙은행 주택담보대출완화 정책, 시중은행 이행률 저조(중국경제주간, '14.11.17)
3.3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출규모는 축소(화화시보 '14.11.19)

【 揭 示 板 】

[1편 : 주간 환경 이슈]

1.1 환경보호부 10월 짚 소각금지 상황 발표

(중국환경망 2014.11.17)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2014년 10월 전국 짚 소각금지 상황을 발표했다. 10월 위성모니터링 데이터통계와 각지의 현장조사와 결과 보고에 따르면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사천, 귀주, 운남 등 7개성에서 짚 소각지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23개 성(구, 시)에서 총 2168개가 발견되어 2013년과 비교하여 동기대비 356개가 줄어 14.1% 감소하였다. 관계자는 전기 짚 소각 위성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짚을 태우는 행위가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월 전국 짚 소각지점 상황은 흑룡강 565개, 길림 470개, 하남 319개 요녕 266개 내몽고 114개 산서 111개 안휘 76개 산둥 69개 호북 54개, 영하28개, 하북 27개, 신장 19개, 감숙 16개, 강서 14개, 광서 7개, 호남 4개 섬서3개, 청해, 복건, 광둥, 해남, 절강, 강소 등 6개성이 각각 1개로 나타나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 길림 등 6개 성의 발화수는 2013년과 비교하여 동기대비 평균 모두 증가하였다. 길림 388개, 흑룡강 366개, 요녕 257개, 내몽고 4개, 강서 1개, 해남 1개 증가하였다. 안휘 등 17개성은 2013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하여 발화 데이터는 2013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하여 안휘 453개, 하북 208개, 산서 207개, 호북 182개 산둥 107개 하남 57개 신장 52개 섬서 30개 강소 21개, 영하 20개, 호남 18개, 광둥 6개, 청해 5개 감숙 3개 광서 2개 천진 1개 복건 1개 감소하였다. 북경, 상해, 중경, 사천, 운남, 귀주 등 6개 성은 2년 연속해서 10월에 짚 소각 지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 짚 소각의 강도를 보면, 평균 매 천 헥타르 경작지 면적 발화강도 5순위로 길림, 요녕, 흑룡강, 하남, 산서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관계자는 짚 소각금지를 대기오염방지의 중요한 조치로 국무원이 2014년 4월 발표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실시상황심사대조법(시행)>이 이미 각성 인민정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는 모두 이를 중시하고 있고 실용적인 조치로 소각금지를 강화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산둥성은 짚 소각금지를 2014년 환경보호 전문사업 행동중점 조사내용에 포함시켰고, 6월부터 시작하여 3개 조사팀을 할구(轄區)내 각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각지에서도 상응하는 환경보호, 농업,公安 등의 부서가 팀을 이루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팀을 꾸렸다. 조장시(棗莊市)는 주요도로와 시골도로의 순환 조사, 이른아침과 야간의 중점 순찰 방식으로 발견과 화재방지에서 발견과 재난방지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청도시(靑島市)는 핸드폰 문자발송, 플랜카드 홍보, 자료인쇄배포 등의 방식을 통하여 마을마다 홍보 글을 볼 수 있게 하고 집집마다 연락망이 구성되어 있다.

호북성 형주시는 <짚 소각금지와 종합이용 시범방안>제정하여, 시범구역 내 매년 1만톤 이상의 짚 수거저장창고를 마련하여 검수 후 장려금 20만 위안을 책정하여 매년 운영보조금으로 10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짚 소각금지 관리감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 비행기가 수시로 소각금지 구역을 순시하며, 비행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측정과 지상의 인원이 발화위치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올해 이래로 형주시의 대기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위성원격모니터링 10월 짚 소각 금지 통계표>

No.	성(省)	발화 수(건)	작년 동기대비(건)
1	흑룡강	565	366증가
2	길림	470	388증가
3	하남	319	57감소
4	요녕	266	257감소
5	내몽고	114	4증가
6	산서	111	207감소
7	안휘	76	453감소
8	산둥	69	107감소
9	호북	54	182감소
10	영하	28	20감소
11	하북	27	208감소
12	신장	19	52감소
13	감숙	16	3감소
14	강서	14	1증가
15	광서	7	2감소
16	호남	4	18감소
17	섬서	3	30감소
18	강소	1	21감소
19	절강	1	변화없음
20	해남	1	1
21	광둥	1	6감소
22	복건	1	1감소
23	청해	1	5감소
24	사천	0	변화없음
25	천진	0	1감소
26	중경	0	변화없음
27	귀주	0	변화없음
28	운남	0	변화없음
29	상해	0	변화없음
30	북경	0	변화없음
합계		2168	356감소

[2편 : 정책자료 · 기타]

2.1 상해스모그 황색경보

(중국환경망 2014.11.18)

가을이 된 이래로, 상해는 또다시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상해기상센터 11월 17일 6시58분 미세먼지 황색경보를 발령하여 오늘 오전 상해시의 가시거리가 5000m미만으로 전망했다. 시민들에게 조 기 경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공기질량이 좋지 않아 주의할 것 과 호흡기 환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상해시 환경보호국의 실시간모니터링 데이터는, 11월16일 저녁부터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상해시의 공기질량실시간시스템은, 11월17일 6시부터, 전체도시의 초미세먼지가 평균농도 172.9 $\mu\text{g}/\text{m}^3$, 실시간 공기질량 지수는 223에 이르는 심각한 오염상태에 이르렀다.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청포정산(青浦淀山) 호수의 초미세먼지는 194.9 $\mu\text{g}/\text{m}^3$, 가장 낮은 곳으로 포동천사(浦東川沙)의 초미세먼지가 139.2 $\mu\text{g}/\text{m}^3$ 에 이르렀다. 상해시 환경보호부서는 어린이,노인, 심장병 ,폐 질환 환자에게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물고, 야외활동을 삼가고, 일반인에게는 실외운동을 줄이라고 권유했다.

[3편 : 중국 풍경]

3.1 북경-우루무치 16시간만에 잇는 고속철, 2017년 개통

(온바오 2014.11.17)

중국 언론은 지난 16일, 난주(蘭州)-우루무치를 잇는 난신(蘭新)철도의 우루무치-하미(哈密) 구간이 정식으로 개통됐음을 알리며 "2014년 말에는 하미-난주 구간, 2017년에 우루무치-북경 고속철이 개통된다"고 전했다.

북경-우루무치 고속철이 개통되면 기존의 41시간 걸리던 운행시간이 16시간으로 대폭 단축되며 난주-우루무치 구간 역시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절반 줄어든다.

한편 지난 16일 개통된 난신철도의 우루무치-하미 구간의 고속철은 신장자치구 최초의 고속철 노선이다. 총길이 530km의 철도 구간은 시속 200km로 운행돼 기존의 5시간 걸리던 운행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됐다. 우루무치남역을 출발해 투루판북(吐魯番北), 산산북(鄯善北), 투하(吐哈)역을 거쳐 중작역인 하미역에 도착하게 된다.

난신철도 전구간이 개통되면 총길이 1천776km로 감숙(甘肅), 청해(青海), 신장(新疆)자치구를 잇게 돼 현재까지 개통된 고속철 중 최장 길이의 고속철이 된다.

광주(廣州)에서 우루무치로 갈 경우에도 이번 고속철 구간 개통으로 서안(西安)을 경유해 란저우, 우루무치로 가게 되면 기존의 55시간에서 45시간으로 10시간 단축됐다.

【環 境 動 向】

1. 정책 · 법률 · 기타

1.1 수십조(水十條)실행 초읽기에 들어가, 투자규모가 대기방지보다 커 (중국환경망 2014.11.18.)

- 사전에 미리 준비되었던 수십조(水十條)가 곧 실행된다. 최근 환경보호부는 전국 환경보호 시스템 화상회의를 열어, 환경보호부 부장 주생현(周生賢)은 전력을 다해야하는 중점작업을 강조하였고, <수질 오염방지행동계획>(이하: 수십조)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소개하였다.
- 작년 심각한 대기오염 방지조치로 “대기십조(大氣十條)”가 발표된 이후, 수십조(水十條)의 관련동향은 각 층의 주목을 받았다. 일찍이 수십조에 편제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는 <매일경제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이래로 수십조는 여러 번의 연구토론을 거쳐 보완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인대배자위법안실(全國人大環資委法案室) 부주임 왕풍춘(王鳳春)은 인터뷰를 통해 관련부서가 이미 수십조를 수 년간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내에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2월, 주생현(周生賢)은 북경에서 환경보호부 상무회의를 주관하여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을 한 단계 더 보완하여 국무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많은 환경보호부 관계자들이 환경보호부는 수십조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개 발표하였다. 주생현(周生賢)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호부의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부서의 조치에 관하여 5가지 중점작업으로 실시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APEC회의기간 대기질량 확보작업경험과 집법, 새롭게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실시,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의 실시, 연말작업결산, 환경보호상황 연구 등이 포함된다.
- <2013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장강, 한하, 주상, 송화강, 회하, 해하 등 10대 수계의 정부 통제 가운데 4-5급과 5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질의 비율은 각각 19.3%, 9.0%로 나타난다. 4778대 지하수 모니터링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의 비율은 59.6%에 이른다.
-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방지를 비교해보면 수질오염방지의 어려움이 더 크다. 2014년 2월 환경보호부 부부장 장적청(長靑靑)은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소개 시, 핵심은 수질환경질량 개선이고 중점사항은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하나는 오염이 심한 지역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질이 비교적 좋은 지역을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 왕풍춘(王鳳春)은 수질오염방지에 드는 예산이 대기오염방지보다 더 필요하며 규모도 더 커야한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면 오수처리장 등 관련 있는 공공시설의 건설을 말할 수 있다. 작년 7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부처장 장왕도(長汪濤)는 중국에서 환경보호산업 고위급 포럼에서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의 투입 예산이 1조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1.2 철도수리공사 등 중대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재촉(중국환경보 2014.11.18)

○ 환경보호부는 최근 <국무원 정책대책 구체화문제와개혁방안 (이하약칭: 정리개혁방안)>을 제정했다. <정리개혁방안>은 지속적인 환경보호 행정심의 개혁, 적극적인 중대투자사업심의추진, 환경보호 산업발전추진촉진, 환경보호관련법률법규추진, 중대환경정책연구강화, 수질오염예방조치등 개혁임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정리개혁방안>에서는 환경보호부가 이미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수질오염 방지활동계획 (이하약칭: 수심조)>를 작성하고, 심의안을 이미 국무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심조> 심의안 전문은 개혁 요구와 법치사유를 드러내고, 엄격한 제도로 수질환경을 보호해야한다고 부각시키고 있다. 11월14일 열린 전국 환경보호시스템 화상전화 회의에서, 환경보호부 부장 주생현(周生賢)이 각 지역에, 곧 실시될 <수심조>의 각 항목을 미리 대비, 대기오염과 같이 수질오염방지를 엄격하게 관리, 명확한 책임분담 실행, 세분화된 조립대책마련, 엄격하게 심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심조>는 국가의 삼대 환경보호 실행계획 중 하나이다, 이것이 중국의 수질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작용할길 기대한다.”라고 환경보호부의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 연말 전 4가지 심의권 취소

<정리개혁방안>은 먼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환경보호 행정 심의 개혁과 더불어 아래 두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첫 번째, 이미 취소한 4가지 행정 심의권을 중심으로 연말 전 까지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재차 언급 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목록에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 제한, 자동허가수입목록에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 취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엄격히 규제했던 자동차 및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취소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오염물배출기준 실행 규정과 수정한 사정허가에 대해 규정, 환경보호부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의 명칭변경 심사결과와 기능성구역 조정 설계는 정부내부의 심의 사항이다. 두 번째, 환경보호부는 위험폐기물 영업 허가증 발급의 사업자등록 사전심의를 후속심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고, 조선소 철거사업환경영향 보고서심의의 사업자등록사전심의를 후속심의로 변경한다. 다음으로, <정리개혁방안>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투자사업심의 추진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서, 환경보호부는 5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재촉하였다. 첫째, 능동적인 교류, 사전 개입, 조사연구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주요한 어려운 문제해결 지도. 둘째, 친환경 방식 개척,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대한 우선 심사, 적절한 심의 확보. 셋째, 환경보호부에 의한 심의에 법정 환경민감구역을 언급하지 않고, 성급 사업과 성급 환경보호부 심의 위탁을 넘보지 않을 것. 넷째, 심의 절차 최적화, 심의시간 단축. 다섯째, 철도사업중 중대교수 등 통제성 공사는 철도부의 심의에 따라 진행. 올해 계획하는 신차공의 64개 중대 철도사업 중, 환경보호부가 심의한 36개중, 아직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1개를 제외 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담한 상태이다.

○ <수심조> 이미 국무원으로 발송

주의사항으로 <정리개혁방안>도 중대 환경정책연구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의하였다. 환경보호부는 생태보호이론심화연구를 통해, <전국생태보호주제분담건의방안>을 연구제정하고, 환경오염 제3자관리 심화연구를 통해, 발개위와 협력하여 <환경오염 제3자관리 의견추진관련>, <혁신분야 투자금융자원 기구관련 사회투자 지도의견>을 기안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상공업자연합회 환경상회비서장 낙건화(駱建華)는 기업환경오염 제3자관리가 오염배출기업과 전문 환경서비스회사계약 체결협의이고, 오염감소배출서비스구매지불을 통해, 표준배출의 목적을 실현하고, 환경보호감시관부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효과를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부서에 따라, 환경보호부, 발개위 등 부서가 정식으로 22개의 <대기10조>결합정책대책을 시행하고 구체화시키길 요구하였다, 2014년10월말, 환경보호전력단가, 차량용 기름질량 개선가격, 석탄질량 관리강화 등 18개 정책실시를 선포하고, 나머지 4개 정책의 의견을 구하고 기안을 편성하였다. 또한, <정리개혁방안>은, <수심조>의 심의안을 이미 국무원에 발송하였다. <수심조>가 지속적으로 <대기10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오직 엄격한 목표를 설립, 더욱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만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예측하고, 여러 부서 유역환경문제의 관리효과를 단기간 내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한 환경보호관계자는 수질환경영역 계획은 이미 충분하고 지표수에 관련하여 이미 <중점유역수질오염방지12.5계획>과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호수 생태환경보호 총체적 계획(2013-2020년)>두개의 전문항목계획이 있고, 지하수에 관련하여 <전국지하수오염방지계획(2011-2020년)>전문항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1.3 환경보호정책은 심의에 의거(환경정보망 2014.11.19)

○ 11월18일 국무원은 <정부 심사 비준 관련 투자프로젝트목록 통지(이하약칭: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투자체제개혁과 행정심의제도개혁을 한 단계 심화한 것으로, 행정기구를 간소화 하여 권한 이관 확대를 통해 정부투자관리 직능전환에 적합하여, 기업투자주체지위를 확립하고 더 좋은 정부작용을 발휘하여 거시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개선하기위한 것이다.

○ <통지>는 법률, 행정법규와 정부가 제정한 발전계획, 산업정책, 총량규제목표, 기술정책, 용지정책, 환경보호 정책, 신용대출 정책 등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중요한 근거로 비준기관, 국토자원, 환경보호, 도시계획, 업종관리 등의 부서 및 금융기관 사업진행 심의근거를 지적한다.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영향정도에 근거하여 등급을 나누고 관리 대상을 분류하여 환경영향이 크거나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환경평가 심의를 엄격히 진행하고 사후관리도 엄격히 이루어진다. <통지>는 철강, 전해알루미늄 슬러지, 평판유리, 선박 등 생산능력이 과잉되는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집범을 강조하였다. 각 지방, 각 부서는 다른 어떤 명이나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이 금지 되었고, 각 관련부서와 기구는 토지(해역)공급, 에너지 평가, 환경평가 심의와 지원을 하는 업무는 생산능력이 과잉되는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집범이 집행된다. <통지>는 원유, 천연가스개발 사업은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무원 업종관리 부서에 보고 할 것을 명확하게 했다.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업은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지속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자원이용과 무분별한 채굴을 피해야 한다. 이외에 <통지>는 사업 심사비준 기구는 완벽한 관리를 해야 하며 행정효율을 높이고 완벽한 비준심사 직능을 이행하며 엄격한 규정권한에 따라 절차와 기한 등 요구에 따라 심의조사할 것을 지적했다. 법률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권한이나 절차비준 혹은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는 관련 수속을 해주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도 신용대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4 비화석 에너지 기계설치 비중 연말까지 1/3, 구조 우수화 추진(기후변화정보망 2014.11.19)

○ 2014년 말 중국 전력 총량은 약 13.3억kw로 동기 대비 6.8%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 수력발전 22.7%, 화력발전 66.5%, 원자 발전이 1.4%, 풍력발전 7.5%, 태양열 발전이 1.8%를 점유한다. 비화석 에너지 기계설치 비중은 33.5%다. 11월 15일 국망에너지연구원(國網能源研究院)은 <2014년기초연구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의 예측에 따르면, 2014년 중국전력 성장은 침체될 것이며 그 속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량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여 용량구조가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이다.

- 국망에너지연구원(國網能源研究院) 원장 장운주(張運洲)은 발표회에서 현재 국내 에너지수요의 지속적인 성장, 전통에너지 산업의 과잉, 친환경 우수에너지발전 부족, 대기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직면하여 “13.5”에너지 전력발전은 “안전, 친환경, 고효율,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준수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소비총량의 빠른 증가 규제, 에너지구조조정 촉진,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표회와 같은 시기 중국 전력 및 에너지연구회는 회의를 열어 관련 책임자와 전력전문가를 초대하여 거시적 경제추세 및 판단, 에너지전력구조조정과 대기오염관리, 신에너지와 분포식 에너지과학발전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교류를 가졌다.
- 2009년 이래로, 국망연구원(國網能源研究院)은 연속 6년 기초연구 연도보고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첫 보고로 총 8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전력공급, 국제에너지 발전, 에너지 가격, 전력시장 등 여러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5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 3대 관점(기후변화정보망 2014.11.20)

-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추진은 전반적인 계획강화를 필요로 한다. 11월 19일 공포한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은 지속적인 “절약, 친환경, 안전”의 전략방침으로 친환경, 고효율, 안전, 지속가능한 현대 에너지 시스템 가속을 제안한다.

○ 소비총량규제, 에너지안전 보장

중국은 이미 세계 제일의 에너지소비 대국이 되었다. 에너지생산과 소비의 빠른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오염과 에너지 안전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행동계획은 절약우선, 국내안전, 친환경저탄소, 혁신이라는 4대 전략을 제안한다. 절약우선 전략은 에너지효율 향상,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총량 통제를 말한다. 행동계획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총량을 48억 톤(석탄) 기준으로 하고 석탄소비 총량을 42억 톤 으로 규제할 것을 명확하게 했다. 중국공업경제 연합회 회장 이의(李毅) 이는 실무적인 것이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1.5%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GDP의 12.3%를 창조해낸다. 2020년까지 48억 톤을 초과하지 않는 목표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1차 에너지소모 총량의 증가폭을 연 3.5%이하로 규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너지 안전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자원의 모든 항목에 대한 수입국이 되어 석유대의 의존이 60%에 이르며, 천연가스 대외의존도는 30%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행동계획은 2020년까지 국내 1차 에너지생산총량이 42억 톤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급능력을 85%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동계획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천연가스 탐사개발 규제, 연 생산량 100억㎥급 이상의 대형 천연가스 생산기지 8개 건설할 것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해결책으로 암석가스와 석탄층 가스를 개발하여 2020년까지 암석가스 생산량 300억㎥를 초과, 석탄 가스층 생산량 300억㎥ 목표에 도달할 예정이다.

○ 석탄소비규제, 우수한 에너지 구조

현재 중국에너지구조는 모순을 띄고 있다. 중국에너지연구회 상무 부이사장 주대지(周大地)는 중국에너지구조는 석탄위주로 개발이용방식이 소홀하며 주요오염물과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세계에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행동계획은 천연가스, 핵 발전,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적극 발전시켜 탄소소비비율을 낮추고, 에너지구조의 지속적인 우수화 추진을 제안한다. 202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1차 에너지소비비율은 15%, 천연가스 비중은 10%이상, 석탄소비 비중은 62% 이내로 규제할 예정이다. 석탄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행동계획은 정진지 및 산둥,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구역 선탄 소비 총량을 감소 할 것을 특별히 명확하게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정진지 및 산둥 4개성 도시 석탄소비를 2012년 보다 1억 톤 감소시키고,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지역 석탄소비 총량을 마이너스 성장 시킬 계획이다. 국가에너지국 국장 오신웅(吳新雄)은 이전 전국 13.5에너지 계획회의 상에서 중국에너지구조 가운데 화석에너지에 비중이 높고 석탄소비 비중이 66%로 세계 평균수준인 35.8%보다 높다고 밝혔다. 비화석 에너지는 에너지 소비 총량의 9.8%로 2020년 비 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15%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임무가 매우 막중하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용추진에서 행동계획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비중을 높여 2020년까지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소비 가운데 비중을 10%이상으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도시생활 공정을 기화하고 도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핵 발전은 국제최고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 동부 연안에 새로운 핵 발전소를 건설하여 내륙에 핵발전소 건설을 연구 토론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핵 발전용량은 5800만kW 건설중인 용량은 3000만kW이상이다. 2020년까지 수력발전은 약 3.5억kW, 풍력발전은 2억kW으로 계획하고 있다.

○ 에너지체제 개혁

에너지체제 개혁의 심화는 현대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에너지안전 제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무원 자원발전연구센터 및 환경정책 연구소 소장 고세즙(高世楫)은 에너지체제 혁명추진의 중요한 내용은 빠르고 완벽한 에너지관리감독체제 및 환경관리감독으로 에너지관리감독의 유효성과 효율을 높여 에너지시장의 유효한 경쟁을 촉진 및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계획은 에너지 가격개혁 추진을 제안한다.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분야의 가격개혁 추진은 경쟁성 일환의 순차적인 가격개방, 천연가스 판매가격, 전기가격과 판매로 시장형성 등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점분야와 개혁을 관건으로 전력체제 개혁을 촉진하여 쌍방간의 직접교역을 추진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형성을 추진한다. 에너지 관리감독 면에서는 에너지 발전전략 계획, 정책, 기준 등 정부와 기업 간의 기구를 간소화 하여 권한을 하부기관에 양도, 행정심사권 이관 등을 제정 실시한다.

2. 사업계획 · 발주동향

2.1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친환경저탄소에너지 공략 방향(기후변화정보망 2014.11.20)

- 국무원은 최근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2014년-2020년, 이하약칭: 계획)>을 인쇄 배포하여 2020년 중국에너지발전의 총체적인 목표와 전략방침 및 중점임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계획>은 중국에너지 발전의 5가지 임무를 명확하게 하였는데, 에너지 자주보장 능력 강화, 에너지소비혁명 추진, 우수한 에너지구조,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 에너지기술혁신 추진이 이에 속한다. 친환경저탄소는 <계획>이

4대 발전전략의 하나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계획>은 우수한 에너지구조와 발전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를 조정에너지 구조의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비 화석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고효율 친환경 이용에 대한 병행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점진 탄소소비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천연가스 소비의 비중을 높이고 풍력, 태양, 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소비비중을 대폭 증가시킨다.

- 구체적으로 말해서, <계획>은 2020년 까지 비 화석에너지 1차 에너지소비 비중을 15%, 천연가스 비중을 10%이상 석탄소비 비중을 62% 이내로 통제할 계획이다. 이어서 징진지 및 산둥,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등 지역 석탄소비 총량을 제한했다. 2020년까지 징진지 및 산둥 4개 성 석탄소비는 2012년 보다 1억 톤 감소시킬 것이며,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지역 석탄소비 총량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 중점 사용하는 석탄분야 소비를 규제. 경제발달지역과 대, 중도시를 중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중점 이용하는 석탄분야 공정, 과잉 열기 및 압력, 분산 석탄 소형 용광로를 선별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중점지역 석탄용광로, 공업용광로 등 천연가스 대체개조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소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은 도시생활을 기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롭게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우선 사람들의 생활과 분산되는 석탄을 대체해야 하고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친환경화 계획으로 조직 실시하여 2020년까지 도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절한 천연가스의 발전. 징진지 및 산둥,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중점 방지 구역은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조절 발전소, 열 부하가 요구하는 천연가스 발전을 결합하여 증기순환을 발전시킨다. <계획>은 완벽한 에너지 세금정책을 제안한다. 자원에너지 세금개혁, 적극적인 친환경 비용세금 추진, 점진적인 증가정수 범위 확대 등을 말한다.

3. 환경오염현황 및 관리

3.1 APEC기간 대기상태 전력을 다해 확보 (중국환경망 2014.11.17)

- 관례에 따르면,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은 북경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북경에서는 의외의 상황이 나타났다. 연속해서 근 2주가량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지속되어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이 기간 북경에서는 국제회의인 APEC회의가 열렸으며, 비교할 수 없는 맑은 하늘은 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경시 환경 모니터링센터의 데이터는 11월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시 공기 가운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농도가 각각 m^3 당 43ug, 62ug, 8ug, 46ug으로 나타나 작년동기대비 각각 55%, 44%, 57%, 3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오염물 농도는 모두 최근 5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1월4일부터 5일까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두 차례 기상조건이 극단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시 대기상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대기의 상태를 확보하였다. 이와 동시에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고, 산둥 등에서 대기상황이 동기대비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북경시 환경모니터링 센터 초기통계에 따르면, 징진지 및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동기대비 29%가량 감소하였다. APEC회의 기간 대기 상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진지 및 주변지역은 최선을 다해 대기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APEC회의 대기상태위하여 책임자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 증거를 마련하고 협조를 구하고 방안을 세워 대기상태를 확보를 위한 기초를 세우

는 점을 중시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지도자 동지들은 APEC회의기간 대기확보를 중시 여기고, 습근평(習近平) 총서기가 직접 여러 차례 지적, 이극강(李克強) 총리, 장고려(張高麗)부총리도 여러차례 관심을 가졌다. APEC회의가 시작 된 후, 장고려 부총리는 또 2차례 지시를 통해 대기상태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일찍이 2013년 국무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이후에 부서들은 2014년 APEC대기 질량확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초 환경보호부와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협조기구는 APEC 공기질량확보를 위해 중점 계획에 포함시켰다. 북경시는 충분히 협조기구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변 성과의 적극적인 협조 및 공동으로 <APEC회의대기질량 보장 방안>을 연구 편찬하였다. 10월24일 장고려 부총리는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협조팀의 제 3차 회의에 참석하여 이 방안을 심의 통과 시켰다.

○ 징진지 및 주변지역 지방위원회와 지방정부는 확보방안과 실시작업을 매우 중시

북경에서 북경시 위원회 서기 관금룡(郭金龍)은 두 차례 징진지 협조기구 회의를 열었으며, 여러 차례 시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질량확보작업을 연구하고 회의기간 북경시 환경모니터링 센터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북경시 시장 왕안순(王安順)은 영상회의를 열어 한 단계 발전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천진에서는 천진시 위원회 서기 손춘란(孫春蘭)은 보고를 듣고, APEC대기질량 확보와 기업 오염관리를 강조하였다. 천진시 시장 황흥국(黃興國)은 여러 차례 작업진전을 물어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산둥에서는 산둥성 위원회 서기 강이강(姜昇康)은 성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APEC기간 대기질량확보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기업들의 생산정지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하는 것임을 제안했다. 하북에서는 하북성 성장 경위(慶偉)가 대기오염방지작업 시 APEC대기질량 확보작업은 년초 인민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오염방지 임무의 1차 검증으로, 이는 생태환경건설이며 하북성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산서에서는 산서성 성장 소봉(小鵬)이 성 정부 상무위원회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어 대기질량 확보작업을 연구하였으며 태원(太原), 진중(晉中), 양천(陽泉)등지의 환경보호 감독조사를 진행하였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였다. 각지의 APEC회의 기간 대기질량 확보작업에 대한 독촉 및 지도를 위하여 환경보호부는 6차례 회의를 열어, 부서 책임자를 팀장으로 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10월20일부터 25일에 이르기까지 환경보호부는 16개 조사팀을 파견하여 징진지 및 주변지역 24개 중점도시보장방안 부서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였다. 11월3일 북경,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고, 산둥 등 6개 성은 확보방안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11월4일부터 4일까지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점을 대응하기 위하여 북경시 및 하북성 8개 도시는 대응방안을 기초로 하여 심각하게 오염된 기상 조건의 가장 최고단계의 대응 조치를 발령하였다. 11월6일 위에서 말한 지역이외에 천진시, 하북성 당산, 형수(衡水), 창주(滄州)시 및 산둥성 제남, 치박(淄博), 동영(東營), 덕주(德州), 요성(聊城), 빈주(濱州)시도 가장 높은 1급 대응 조치를 취하여 오염 배출을 크게 제한하였다. 산서, 내몽고 등은 자발적으로 오염배출을 감소하였다. 산서성 정부는 11월 5일 태원(太原), 양천(陽泉), 진중(晉中) 3개 도시에 최고 1급 대응 조치를 기초로 하여, 11월8일 다시 장치(長治), 진성(晉城) 두 도시에 최고 1급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내몽고 호화호특(呼和浩特市), 포두(包頭), 적봉(赤峰), 오란찰포(烏蘭察布), 석림(錫林郭勒) 등 5개시는 기업에 생산정지 조치를 취하여 1097기업과 관련작업이 생산중지 혹은 생산정지를 받았다. 환경보호부의 데이터는 초기 예측으로 6개 성 구, 시가 회의기간 9298개 기업 생산정지, 3900기업 생산제한, 4만여 곳 공사 중지로 예측되어 각각 대응방안의 3.6배, 2.1배, 7.6배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각지는 중점기업에 대해 24시간 상주 관리감독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집범을 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회의기간 대기의 질량을 확실하게 확보하였다. 각급 정부는 주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직지도자의 책임, 대응방안이행, 부서별 협조를 강조하였다. 북경시 부시장 장공(張工)은 조사팀을 이끌고 남아 있는 현(縣) 정부의 상담에 응하였다. 천진시 부시장 윤해림(尹海林)은 중점 현에 조사를 진행하여 각 현에 관측소를 설치, 24시간 상주인원감시를 요구하였다. 북경, 통주(通州)에서는 분진이 날리는 오염문제에 대하여 <분진오염작업방안>을 인쇄 배포하여, 실무부서를 세분화, 각 촌과 도시에 분진 관리감독 책임, 각종 공사장 시공, 건축 쓰레기 및 운송관리기준, 분진위법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률조항과 주체적 책임을 적용하여 분진오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효과를 얻어냈다. 산서에서는 각 시와 현급을 일괄 통합하여 생산 및 제한하는 기업의 수를 늘렸고, 현지 오염원 특징에 따라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태원시(太原市)는 APEC회의기간 슬러지 업종 전부를 작업 중지 시켰고, 대동시(大同市)의 시골지역에서는 조사팀을 꾸려, 완장을 차고 경작지를 감독하여 짚을 태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혼주시(忻州市)에서는 APEC기간 벚꽃 소각 금지와 삼림 화재방지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經 濟 動 向】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제공

1. 주요기사

1.1 '14.10월 재정소득 중 서비스 업종 기여도 증가(신화망, '14.11.15)

- o '14.11.14(금) 재정부가 발표한 '14.10월 재정소득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14.10월 전국 재정소득은 1.3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했으며, 중앙정부 재정소득도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o 또한 '14.10월 기업소득세는 3,58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금융 업종 기업소득세 96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7.8% 증가, 공업 업종의 기업소득세 증가폭 45.7%보다 12.1%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o 이에 대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과거 기업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업종은 석탄·발전(發電)·석유 등 업종이었으나, 근래 들어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의 기업소득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 o 반면, '14.10월 영업세는 1,68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영업세와 건축업 영업세는 각각 361억 위안과 335억 위안으로 부동산 시장 불황의 영향을 받아 각각 전년 동기대비 -7.8%와 -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1.2 공업·신식화부, '14.12월 스팸문자 처리규정 발표 예정(신화망, '14.11.17)

- o '14.11.17일 신화사(新華社)는 공업·신식화부(工業與信息化部)(이하 '공신부')가 현재 '통신문자정보서비스관리규정(通信短信服務管理規定)(이하 '규정') 초안을 작성 중이며, '14.12.5일 의견수렴을 거쳐 '14.12월 말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함.
- o 상기 규정 초안에 따르면, 스팸문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문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업적

인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로 정의되었으며, 단순히 휴대폰으로 발송·수신하는 스팸문자 외에도 SNS, 휴대폰 메시지 Wechat(微信) 등을 통해 발송·수신되는 광고성 콘텐츠도 스팸문자로 규정, 향후 새로운 통신 플랫폼을 이용한 스팸문자 발송을 근절할 예정임.

- o 또한 상기 규정 초안은 문자 발송자는 반드시 문자 수신자가 스팸문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문자 발송자가 기술적 장벽을 이용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3 국무원, 상업건강보험 발전 촉진 의견 발표(매일경제신문, '14.11.18)

- o '14.11.17일 국무원은 의료·건강증진 분야의 상업보험 개혁 추진을 위해 '국무원 판공청의 상업건강보험의 조속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國務院辦公廳關於加快發展商業健康保險的若干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함.
- o 상기 의견을 통해 국무원은 상업건강보험 중 의사·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Medical 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 의료사고보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의료사고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의사·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
 - 의사·병원이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 o 이 외에도 국무원은 상업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외국 경험과 중국 실정을 결합하여 상업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을 보완할 것이며, 중대(重大)질병 보험보장기금 설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o 이에 대해 업계 인사들은 의사배상책임보험과 의료사고보험이 발전하면 보장 범위가 넓어져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와 환자 모두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료기관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의 기술 및 관리의 수준, 의료진 수에 따라 보험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함.

1.4 중앙기율위원회, 제3차 순시 계획 발표(신경보 '14.11.19)

- o '14.11.18(화) 중앙기율위원회는 제3차순시 계획을 발표, 향후 한 달간 문화부, Sinopec(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차이나 유니콤 등 13개 중앙정부부처·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에 대해 집중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14년 실시된 중앙기율위원회 감사를 통해 31개 성(省)·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인 수리부(水利部), 과학기술부(科技部), 상무부(商務部),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인 중국출판집단(中國出版集團),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 중량집단(中糧集團) 및 중국인민대학교와 푸단대학 등 대학교 등이 감사를 받음.

(*) 중앙기율위원회 제3차순시 대상

- 국유기업: 남방항공(中國船舶), 중국선박(中國海運),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중국해운(中國海運), 화덴그룹(華電集團), 동평자동차(動風汽車), 신화그룹(神華集團), SINOPEC(中石化)
- 정부부처 및 정부관련 조직: 문화부, 환경보호부, 중국과학기술협회, 전국공업상업연합회, 중국국제

- 라디오방송국(中國國際廣播電臺)
- '14.11.18(화) 개최된 중앙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중앙기술위원회 왕치산(王岐山) 서기는 '융통성 있는 방법을 이용해, 한 달 안에 반드시 특별감사를 완료해야 하며, 개별 안전·개인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성을 발휘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가행정학원(國家行政學院) 주리자(竹立家) 교수 등 전문가는 제3차 순시 계획의 대상은 주로 남방항공(南方航空), 중국선박(中國船舶), 차이나유니콤, 중국해운(中國海運), 신화그룹(神華集團) 등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국유기업에 대한 반부패 운동 추진 의지를 볼 수 있다고 평가함.

1.5 시진핑 주석, 세계 인터넷 대회 개막식 축사 전달(신경보 '14.11.19)

- '14.11.19(수) 제1회 세계 인터넷 대회(世界互聯網大會)가 저장성(浙江省) 우진(烏鎮)에서 개최되었으며, 마카이(馬凱) 국무원 부총리가 개막식에 참석,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사를 대독함.
 - '14.11.19(수)~'14.11.21(금) 개최된 제1회 세계 인터넷 대회는 중국이 개최하는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인터넷 대회로 100여개 국가·지역 정부 관련 인사 및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 CEO, Tencent(騰訊)의 마화팅(馬化騰) CEO, 샤오미(小米)의 레이쥔(雷君) CEO 등이 참석함.
- 시진핑 주석은 축사를 통해, 중국은 현재 적극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 협력 심화, △인터넷 주권·인터넷 안보 수호, △다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상호 협력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구축, △다자주의적·민주주의적이며 투명한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건설을 제안함.
- 또한, 시주석은 제1회 세계 인터넷 대회는 '상호소통·상호연계·거버넌스 공유'를 주제로 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라며, 회의 참석자가 지혜를 발휘해 인터넷을 발전시켜나가,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1.6 국무원, 기업 자금조달난의 해소를 위한 10대 조치 추진(경제참고보 '14.11.20)

- '14.11.19(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의 자금조달난 해소, 신규 창업 촉진과 국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0대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
 - (제도 개선)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 규제 완화, 총액대출한도 증액을 통해 중소기업·농민·농촌·농업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 확대, ▲신용체계 보안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 투명도 제고, ▲상업은행 실적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사업 방지, ▲금리시장화 개혁 촉진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 ▲관리·감독 및 정책제도 보완, 대출 수수료 징수 제도화 및 불법 자금모집 행위 근절
 - (대출기관·서비스 다각화) ▲민영은행, 중소기업은행, 담보기관, 제담보기관 발전 추진, ▲모바일은행·인터넷금융 등 금융서비스 다원화, ▲역외자금조달 발전 지원, 더 많은 중국기업과 저렴한 글로벌 자본의 협력 촉진
 - (자금조달시장·주식시장 활성화) 자산융통화 등 다양한 금융 방법을 통한 자금시장 활성화, 주식 발행·등록제도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제한 완화
- 상기 국무원 발표에 대해 쓰촨성(四川省) 지역 한 은행 관리자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와의 인터뷰

에서, 비록 중앙은행이 그간 선별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해 시장에 자금을 방출했지만, 예대율 기준·자기자본금 기준·총액대출한도(*)·소유주 자본 등 4대 제약 요소로 인해 대출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힘.

- (*) 총액대출한도(合意貸款)
 -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에서 각 은행에 대한 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놓는 제도로,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은행별 대출규모와 대출대상을 결정할 수 있어 유동성 조절에 용이함.
-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工業經濟研究所) 뤼쑤웨이(羅仲偉) 연구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업그레이드를 추진하려면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기업에 지원해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고정자산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금융, 민영은행 등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1.7 15년 지방채 규모 확대될 것으로 예상(중국증권보 '14.11.19)

- '14.11.19(수)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도시화 추진과 기초인프라건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15년 지방정부는 '14년보다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이지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귀타이쥔안(國泰君安) 연구소 장리(張莉) 수석 연구원은, '14.9월부터 중앙정부는 기존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지방자금조달공사(地方融資平臺公司)가 발행해온 準지방채 성격의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城投債)(*)에 대한 감독을 강화, 향후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 발행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미 발행된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이 지방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15년 지방채 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함.
 - (*)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城投債)
 - 각 지방정부들은 도시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금조달공사(地方融資平臺公司)를 설립, 지방자금조달공사가 발행 주체가 되어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을 발행함.
 - 비록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자금조달공사가 발행한 채권이지만, 지방자금조달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은 지방채가 아닌 기업채며, 금융시장에서는 準지방채로 간주됨.
 - 동 채권은 '92년 상하이시가 푸둥신구(浦東新區)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총 5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시초이며, '06년 안후이성(安徽省) 지방자금조달공사인 안후이허페이시건설투자유한공사(安徽合肥市建設投資有限公司)가 동 채권을 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됨.
 - 귀타이쥔안 연구소는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된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은 3.13조 위안으로, 이 가운데 지방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채권 금액이 8,402억 위안이라며, 대외 공개된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의 26.8%가 '15년 지방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 이 외에도 중국 신용평가사인 중칭신국제신용평가유한공사(CCXI:中誠信國際信用評級有限公司) 국제정부·공공융자평가부(國際政府與公共融資平級部) 관페이(關飛) 선임 분석가는 내년에는 지방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사업(**)의 시범대상 지방이 늘어날 것이며, 기존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10개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 지방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사업

- 중국의 지방채는 재정부가 대리 발행하는 지방채와 '11년 지방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지방채로 나뉨.
- '11년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의 투명한 관리와 지방정부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하이, 선전, 광둥성, 저장성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3년 지방정부 자체 발행 시범 대상 지역으로 산둥성과 장쑤성을 추가, '14년 닝샤자치구, 장시성, 베이징, 칭다오를 추가해 총 10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음.

2. 국내산업·시장정보

2.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탄 수출관세 인하 추진(증권일보, '14.11.17)

- o '14.11.17(월) 증권일보(證券日報)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약칭 '발개위')가 석탄 관련 제품 수출관세를 현행 10%에서 3%로 인하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4.12월 석탄 수출관세 조정안을 발표, '15.1.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짐.
- o 중국은 '02년부터 석탄 수요가 급증해 석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04년 석탄 수출쿼터제를 도입한 후, '06.11.1일부로 코크스에 대해 5%의 잠정수출관세를 징수했으며, '08.8.20일부터 코크스 잠정수출관세는 1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유연탄에 대해서도 10%의 잠정수출관세 징수를 실시했으나, '09년 석탄수입량은 1.3억 톤으로 석탄수출량 2,240만 톤을 앞지름.
- o 반면, 최근 2년간 중국 내 석탄생산량 증가, 석탄수요 감소로 석탄업계의 불황이 심각해지자 석탄 수출관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석탄수출 기업인 톈메이그룹(同煤集團)의 장요시(楊有喜) CEO는 '14.3월 개최된 양회(兩會)에 참석, 공개적으로 석탄수출관세를 석탄수입관세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완전 취소할 것을 제안함.
- o 중위자문(中宇資訊) 분석가는, 수출관세가 완전 취소되더라도 중국 내 운송·유통 비용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호주산 석탄에 비해 1톤 당 50위안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출관세 인하로는 가격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출 진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2.2 발개위, 5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가 허가(신식시보, '14.11.18)

- o '14.11.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주말 이미 총 5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가로 허가했으며, 총 1526.97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임을 발표함.

※ 발개위 신규 승인 철도 건설 노선

- 광시성(廣西省) 류저우(柳州)-광시성 우저우(梧州) 철도
- 내몽고(內蒙古) 뤼문현(多倫縣)- 허베이성(河北省) 핑닝(封寧) 만족자치현(滿族自治縣) 철도연장
- 간쑤성(甘肅省) 란저우시(蘭州市)- 간쑤성 허뤄시(合作市) 철도
-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윈난성(雲南省) 쿤밍시(昆明市) 철도 확장 공사
- 닝샤(寧夏) 회족자치구(回族自治區)-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 철도

- o '14.10.16일- '14.11.5일 기간, 발개위는 이미 총 16개의 철도 신규건설·확장건설 프로젝트를 5개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허가해, 총 21개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예상 금액이 7,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1개월간 발개위 승인 건설 프로젝트 개요

- 윈난성(雲南省) 다리(大理)-윈난성 뤼리(瑞麗) 철도
- 라오닝성(遼寧省) 진저우(錦州)- 내몽고(內蒙古) 바이인(白音) 철도
- 윈난성 위시(玉溪)- 윈난성 모한 철도
- 충칭(重慶) 치옌장(黔江)-후난성(湖南省) 장자제(張家界) 철도
-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충칭 완저우(萬州) 철도
- 지린성(吉林省) 송원시(松原市) 공항
- 칭하이성(青海省) 귀러 장족 자치주(果洛藏族自治州) 공항
- 내몽고(內蒙古) 자란툰시(紮蘭屯市) 공항
- 윈난성(雲南省) 란창 라후족 자치현(瀾滄拉祜族自治縣) 공항
- 귀저우성(貴州省) 린화이시(仁懷市) 공항
- 우후창장(蕪湖長江) 철도·고속도로 병용 교량

- o 상하이증권(上海證券) 후웨이샤오(胡月曉) 분석가는 투자는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지만, 현재 부동산 투자, 제조업 투자 등 투자 성장을 둔화가 심화되고 있어, 발개위가 각종 철도, 공항 건설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4.11월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도 다소 회복 될 것으로 예상함.

2.3 발개위, '14년 정부승인 투자프로젝트 목록 발표(인민일보 '14.11.19)

- o '14.11.18(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정부승인투자프로젝트목록(2014년)(이하 '목록)' 발표 브리핑을 개최, '13년 목록 대비 중앙정부 승인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 총 38개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루 기관에 이양했다고 밝힘.
- o 발개위 리푸민(李朴民) 대변인은, 국무원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를 축소,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화합비료, 조선(造船)시설 및 도시 상·하수도 건설 등 15개 프로젝트의 경우 모두 국무원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해외투자의 경우도 일부 민감 국가·업종·품목을 제외한 프로젝트를 모두 등록제로 전환했다고 소개함.
- o 또한 상기 대변인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투자·건설 관심이 높은 화력 발전소, 양수 발전소, 항구, 공항, 정유 플랜트, 철광 광산 개발, 에틸렌 공장, 전력망 건설, 비행기 제조 등 총 23개 항목의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고 소개함.

3. 금융·재정

3.1 국무원, 중소기업 세제 우대 혜택 추가 발표(신화망, '14.11.15)

- o '14.11.15(토)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에너지·교통·환경보호 부담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격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o 특히,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4.2일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확대(*) 정책에 이어 , ▲'15.1.1일부터 기업, 자영업자(個體工商戶)의 등록·등기 비용 등 총 12개 수수료 징수를 취소하고, ▲월별 수익 혹은 영업액 3만 위안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등록일로부터 3년간 교육비, 부가세, 문화 진흥비 등 5개 정부 기금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종업원 20명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등록일로부터 3년간 장애인취업보장금(**) 정수를 면제하기로 함.

(*) 중소기업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확대 정책 개요

- 기업소득세 50% 감면 우대정책 실시범위의 상한선을 '1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소득액 3만 위안 이상 기업에서 6만 위안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취업보장금(殘疾人就業保障金)

- 장애인취업조례(殘疾人就業條例)에 따라 기업은 재직자 수의 1.5%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해당 고용비용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함.

- 이외에도 국무원 상무회의는 정부의 비용징수 투명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금, 민원 서비스 비용 등을 리스트로 정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정부 기금을 개인과 기업에 징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3.2 중앙은행 주택담보대출완화 정책, 시중은행 이행을 저조(중국경제주간, '14.11.17)

- '14.9.30일 중앙은행(인민은행)은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해 최저 기준금리의 30% 할인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은 5대 은행(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 상하이 지역 지점의 경우 농업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이 모두 중앙은행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의 상하이 지역 지점측은 모두 중앙은행의 정책은 지도의견에 불과하며, 은행별로 대출 금리인하 세척이 마련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세척이 없어 기준금리 이하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할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 유일하게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농업은행의 경우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서 30% 인하된 할인 금리를 제공해야한다는 정책과 달리 200만 위안 대출 시 기준금리에서 15%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농업은행이 '14.8월부터 실시해온 금리인하 마케팅과 동일한 우대수준이라며, 중국경제주간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공문서(空文)가 되었다고 보도함.

3.3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출규모는 축소(화하일보 '14.11.19)

- '14.10.14일 중앙은행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14.10월 금융 데이터에 따르면 대출규모는 6,627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4,728억 위안이 감소, 전년 동기대비 2,018억 위안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1-10월간 대출규모는 13.95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4조 위안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4.11.6(목) 발표된 중앙은행의 "14년 3분기 통화 정책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14.9월과 '14.10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edium-term Lending Facility)를 통해 7,695억 위안의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은행의 자금공급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규모는 축소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왕귀강(王國剛) 소장은, 중국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와 중앙은행이 각 은행의 건전성을 예대율, 자기자본 비율, 법정 준비금, 총액대출한도 내 대출 총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4가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화하일보(華夏日報)는 중앙은행이 은행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현행 금융기관 관리·감독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총액대출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자금 공급이 필요한 기업에 유동성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함.